

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

2026. 5. 28

금 융 위 원 회

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

◆ 우리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「포용금융 전략 추진단」 구성 및 운영방향을 보고드립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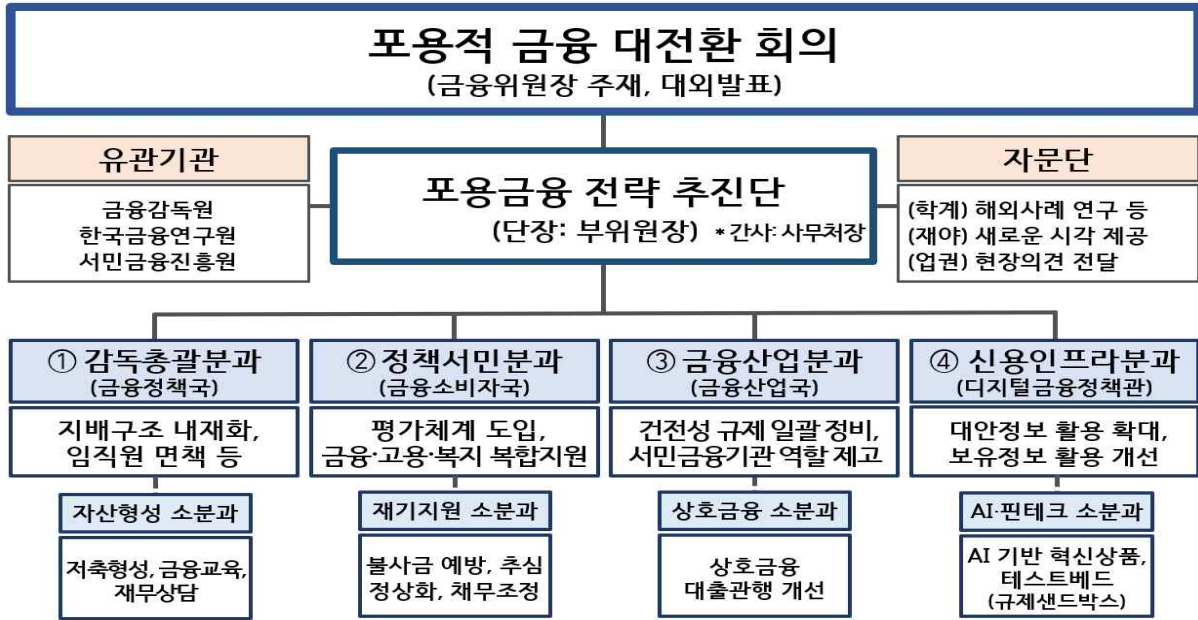
1. 추진 배경

- 새정부 출범 후 1년간 새도약기금·신용사면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 우선 구제
 -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(3~6%대)·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·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낮추고,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고
 - 선진사례를 토대로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전면 혁신*하여 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재기지원과 장기 과잉추심 근절
 - *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, 채권매각규율 강화, 소멸시효 완성채권 원칙적 소각 등
 -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대포폰·SNS 계정 차단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이탈을 차단하고 금융안전망도 강화
- 이제는 금융배제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도화하여 현장에 착근시켜야 할 단계
 - 그간 인터넷은행 도입, 중금리 대출 활성화,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등 여러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,
 - 과거 상환이력 중심의 신용평가, 서민금융기관(인터넷은행·상호금융 등)의 역할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잔존한다는 문제 제기
 - 금융시스템 내부의 작동원리(신용평가·자금중개·인센티브)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항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
- 사회적 관심이 높는데 비해 이슈가 복잡하고 찬반 대립이 있는 만큼,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정책과정관리에도 주력
 - 거대 담론 수준의 문제제기부터 실무적 제도개선 방안까지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해법 마련 추진

➡ 과제발굴, 대안마련, 갈등관리, 전달체계, 메시지 관리 등 정책추진 전반에 걸친 전략적 추진체계 마련 필요

2. 「포용금융 전략 추진단」 구성 및 운영방향

□ [구성] 現 「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」 추진체계 아래 설치



○ 분과별로 금융회사 역할 강화, 제도적·구조적 제약요인, 인프라 개선, 건전성 감독 정비, 항구적 유인 제도화 등 다방면에 걸쳐 논의

□ [운영시계]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되, 금융권의 근본적 관행 개선이 필요한 만큼 금번 정부 임기 동안 항구적 제도화 추진

○ 단순 대책발표를 넘어 방안이 현장에 착근되어 지속가능한 포용 금융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와 정책환류 등에도 만전

□ [운영원칙] 폭넓은 참여와 자기성찰에 기반한 전략 플랫폼

○ 금융위 총괄 하에 금감원·서금원 등 관련 기관, 정책연구원, 그밖에 학계, 시민단체, 재야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구성

- 과제발굴단계부터 현장성과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·재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국민·시장의 정책수용도 및 상호이해 제고

* 과제발굴, 문제진단, 해외사례 조사 단계에서는 민간전문가 발제,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 시도

- 금융회사, 신용정보회사 등 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기존 금융시스템의 관성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고,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해법 마련에 주력

➔ 정부, 유관기관, 재야전문가 등 내외부 관계자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기존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결방안 모색

- [운영방식] 분과별로 논의 진행하되,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논의를 하여 결론에 도달 (Policy buildup)
 - 주제별로 현상진단, 목표설정, 구조적 제약요인, 해외사례 등 논의를 충분히 거쳐 대안 마련
 - 폐쇄적으로 논의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기존과 달리, 금융정책 논의과정 전체 공개 → “현장” 의견을 폭넓게 듣고 어젠다 제안
 - 매 회의 종료후 “논의 쟁점, 제기된 이견, 다음 회의 주제”를 모두 공개하여 정책 논의의 투명성과 국민적 관심 제고
- [논의일정] 6월중 현장 대토론회 방식으로 추진단 kick-off
 - 이후 분과별 수시 회의 진행하고, 결론이 도출되는 과제는 순차적으로 「포용적금융대전환 TF」를 통해 발표